

북한의 '낮은 단계 련방제' 영문 표기 변화에 관한 고찰*

박 소 혜**

❖ 요약 ❖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왔다. 탈냉전기 '느슨한' 련방제를 제시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련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며 통일방안으로 제시한다. 북한은 '느슨한' 련방제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가 의미가 같다고 했지만 '련방제'의 영문 표기에 있어서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에 북한의 '련방' 개념과

'통일'에 대한 맥락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이전 북한이 confederation으로 표기한 것은 '체제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며, 2000년대 부터 federation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을 통일 그 자체로 보기 위해 결합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북한의 통일에 대한 영문 표기가 unification에서 reunification으로 바뀌는 맥락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련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느슨한 연방제, 체제통일, 민족통일

I.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 대한 영문 표기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 '느슨한' 련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2000년 6.15선언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북한은 2000년 제시한 련방제가 곧 1991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련방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련방제에 대한 영어표기는 200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

DOI: 10.35390/sejong.26.3.202008.004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통일 개념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2020)의 5장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으로 바뀐다(The Pyongyang Times 2000/06/17, 1).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제시한 련방제는 이후 한결같이 federation으로 표기되고 있다. 북한은 한글로는 ‘느슨한’ 련방제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가 같은 의미라고 밝혔지만, 영문 표기는 분명히 바뀐 것이다.

북한이 련방제의 영문 표기를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꾼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근거는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년 이전에 북한의 ‘련방제’ 영문 표기가 ‘연방’으로 해석되는 federation이 아니라 ‘연합’으로 해석되는 confederation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었다. 남북관계에서 ‘련방제’라고 표기한 의도와는 별도로 ‘연합’으로 해석되는 영문으로 표기함으로써 대외적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정성장 2004; 남궁영 2006). 혹은 남한이 제시한 ‘연합제’ 역시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연합인 confederation보다는 commonwealth에 가까운 것처럼 북한이 제시한 연방제 표현을 연방제 고유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우성대 2007). 또한 북한의 confederation 표기에 대해 2000년 6.15선언에서처럼 남한의 통일방안인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연합제’에 가까운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남한 측의 해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분석들은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나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15선언 이후 바뀐 북한의 영문 표기 변화와 실제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이나 논쟁이 진전되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남과 북 모두 국가목표는 통일이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과 그 표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련방제 영문 표기’에 대한 논쟁이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는 현재에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련방제’에 대한 영문 표기가 련방제를 제시한 1960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2000년 6.15선언을 계기로 영문 표기가 변화한 시점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영문 표기에 대한 남한 학계의 분분한 해석들을 정리하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표기 변화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련방제’라는 고정된 기호에 담긴 의미의 변천을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회담 등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통일'에 앞서 '평화'가 우선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 개념을 점검하고, 특히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방안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연방과 연합의 의미 구분을 주 작업으로 하지는 않는다. 연방과 연합의 보편적인 개념과 적용 차원에서 북한의 련방제를 해석하기보다는 북한의 '련방제'라는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보는 북한 '련방제'의 영문 표기 변화는 북한이 사용해 온 '련방제' 개념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북한의 통일방안 변화 연구는 더 깊고 넓은 분석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II에서 '느슨한' 련방제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가 등장한 맥락을 살펴보고, III에서 북한의 '련방제' 영문 표기 변화를 살펴본다. IV에서 영문 표기 변화의 의미에 대해 논한 뒤 결론을 맺는다.

II. '느슨한' 련방제에서 '낮은 단계의 련방제'로

1. 용어 변화의 의미

북한은 1960년 이후 남북의 통일방안으로 '련방제'를 제시해 왔다.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명칭은 1960년 '남북련방제'에서 1973년 '고려련방제', 19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김일성이 19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련방제는 기존의 방안과 달리 통일국가의 결합 정도가 '느슨해졌다'는 의미에서 학계에서 '느슨한' 련방제로 통칭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중앙정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

할 용의가 있습니다”(로동신문 1991/01/01, 2).

북한은 1991년 제시한 련방제가 1980년에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잠정적으로, 장차로, 점차적으로”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해 당장은 지역자치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추후로 미루는 것으로서 통일의 완성에 단계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¹⁾ 아직까지는 남북 사이에서의 공식적인 협의와 상관없는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방안에 합의하는 선언이 나온다.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라며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 선언을 통해 북한 측 통일방안은 용어가 바뀌는데 바로 ‘낮은 단계의 련방제’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1991년 ‘느슨한’ 련방제에서 2000년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북한은 2000년 통일방안이 1991년 제시한 방안과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돐 기념 평양시보고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91년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련방제안입니다.”라고 발언하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조선중앙방송 2000/10/06).

하지만 북한이 추후 두 방안 사이에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용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것은 “의미가 같다”는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달라졌을지 모르는 의미”에 대한 분석 작업이기 때문이다.

2. ‘낮은 단계’의 의미

2000년 6.15선언 제2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 문구는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

1) 1991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은 1989년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의 만남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져 있다(이승환 2009, 267).

구와 '련방제'라는 중심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련방제'는 북한이 1960년 이후 고수해 왔던 통일방안의 명칭이다. 즉 바뀐 것은 '낮은 단계'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낮은'은 '높은'이나 '중간' 등과 같이 상대적인 수준을 매기는 표현이다. 통일의 완성도에 수준을 매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91년 제시한 통일방안에서의 "잠정적, 장차, 점차적"이라는 수식어와도 맥을 같이 한다.

통일에 단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북한의 1980년 통일방안과도 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과 북이 한 나라의 지역정부로 기능하는 '최종적'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으로서 과도적이라거나 단계를 둔 것이 아니었다. 즉 지역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갖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91년 이후의 통일방안은 지역자치정부가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갖도록 해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장차로 미뤄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낮은 단계'는 외교와 군사권을 가지는 지역자치정부를 중심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000년의 '낮은 단계'가 1991년의 '잠정적, 점차적'이라는 뜻과 통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통일이 단계가 있으며 그 단계를 밟아 완성된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가 '련방제'라는 말에도 그대로 담겼다고 할 수 있을까? 즉 '낮은 단계'를 수식어로 받는 '련방제' 역시 통일의 단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가 된 것일까?

북한이 련방제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1960년 '남북련방제'의 경우 련방제는 통일의 '과도적 대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김일성이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는 련방제 실시 이후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통일의 과도적 단계에 해당하는 련방제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련합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민족 위원회에서 전민족에 리로운 경제문화적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호상협조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김일성 1981, 244).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선언에 대응해 김일성이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제시한 련방제는 1960년의 남북련방제 방식을 잇는 것으로서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즉 통일의 과도적 단계이면서도 그러한 과도적인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여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김일성 1984, 391). 이는 1980년 제시된 최종적 통일국가로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과는 ‘과도적’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일국가’의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진 것이었다. 이때 ‘련방’은 통일국가의 과도기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통일국가의 국호에 포함되는 지위를 지녔다. 즉 ‘련방’은 통일국가의 국호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는 정통성만큼이나 정당성을 가진 개념으로서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김일성이 제시한 련방제는 ‘통일’만큼이나 중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1991년 신년사는 “전쟁이 현실적위험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하여 ‘교류’보다 ‘평화보장’을 통일의 첫 단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동신문 1991/01/01, 2).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탈냉전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북한은 교류보다는 체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었고 이는 통일이라는 목표 속에도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 위험인 전쟁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통일방안은 ‘교류’부터 시작하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기보다 ‘평화보장’을 단계로 하여 그 평화보장이라는 ‘낮은 단계’ 자체를 ‘통일’로 간주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6.15선언 속 북한의 통일방안에 담겼다. 즉 ‘낮은 단계’는 과도기가 아니라 ‘통일 그 자체’다. 초보적이지만 통일을 위해 거쳐 가는 불안정한 단계의 과정이 아니라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이 단계부터 ‘통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통일방안에 있어서 ‘단계’의 의미는 ‘통일의 과도기’가 아니라 ‘초보적인 통일’이라고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평화보장’이라는 낮은 단계가 곧 ‘통일’이며, 평화보장은 북한에게 있어서 ‘체제보장’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도기의 ‘교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통일의 목표를 ‘정치적 결합’으로 한다면 통일의 완성은 ‘교류’ 등의 단계를 거친 뒤의 ‘체제 통일’이겠지만, 통일의 목표가 ‘체제 유지’라면 ‘평화보장’을 ‘낮은 단계’라고 표현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 이론서인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에서도 “낮은 단계의 련방제가 이루어지면 초보적인 통일로 되나 련합제는 이를 과도적인 통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낮은 단계’의 의미를 ‘과도기’가 아닌 ‘초보적 통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장석 2002, 394).

3. ‘민족’의 초보적 통일

그렇다면 완전하고 최종적인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북한은 왜 ‘정치적 통일’이 아닌 상태를 초보적인 형태일지라도 ‘통일’이라고 간주하게 된 것일까? 이는 대내외 상황과 직결되는데 탈냉전기 세계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실리 추구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국제사회의 우군이 없어진데다 대내적으로도 경제난과 자연재해, 김일성 사망 등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체제보존을 위한 수세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생존을 추구하는 데로 나아가는 과정과 관계된다. 통일이라는 목표는 북한체제의 지향점과 연동되어 변화하는데, 통일방안 역시 ‘적극적인 생존 추구’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통일방안 전략이 바로 1991년 신년사에 제시된 ‘잠정적이고 점차적 형태의 련방제’다. 이는 ‘최종적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19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방법상의 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련방제로 ‘최종적 통일국가’가 될 경우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의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1년의 제안에서는 전환될지 모르는 하나의 체제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는 ‘초보적 형태의 통일국가’를 통일 자체로 간주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19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의 하나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그 내용은 탈냉전과 맞물린 1991년 이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 통일국가가 아닌 낮은 단계더라도 초보적 통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통일이 ‘이익’의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단단한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정부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보장하는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북한의 체제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신년사설에서는 김정일의 혁명적경제정책을 언급하며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로동신문 2000/01/01, 1). 이어 2001년 김정일은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라며 경제 부문에 있어서 변화를 강조한다(로동신문 2001/01/04, 2). 변화의 지점은 북한이 이즈음 ‘자본주의’에 대한 물질적 풍요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인식을 달리하고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이우영 2002, 137). 2000년 남북정상회담 역시 ‘실리’ 차원에서 통일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북한이 체제보존을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통일방안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단어는 바로 ‘민족’이다. 남과 북 두 지역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보다 크게 두어 교류협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자원은 ‘민족’에 있었다. 즉 이익과 민족을 결합해 ‘민족의 이익’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민족’은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과 관련된 통일기구와 조직 등에 포함되는 단어다. 북한이 2000년대 제안한 통일정부는 ‘최고민족련방회의’나 ‘민족통일기구’ 등으로 명명되었다(로동신문 2000/06/25, 6; 조선중앙방송 2000/10/06).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련방제’는 외교와 군사권을 가진 지역정부 간 교류를 초보적 통일로 보는 것으로서 형태는 ‘두 국가’의 연합에 가깝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민족’의 결합으로 표현함으로써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통일방안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즉 민족의 긴밀한 결합이 반드시 정치적 결합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도 통일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북한의 통일 구호는 ‘우리 민족끼리’가 된다. 한편 ‘민족’은 통일 논의에 있어서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민족대단결’이 포함된 뒤 북한에서 개념의 변천을 겪어 왔으며, 탈냉전을 기점으로 ‘민족주의’와 함께 체제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어가 된다.

4. ‘련방’의 개념 변화

‘민족’이 통일에 있어서 중심 고리로 역할을 하면서 조정된 것이 ‘련방’의 개념이

다. '련방'은 북한이 1960년 과도적 련방제를 제시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연방제는 나라에 따라서나 시대상황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북한이 '련방'이라는 단어를 통일방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소련과 독일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로 나뉜 독일이 1957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은 이를 남북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고 지지를 표한 바 있다(로동신문 1957/08/03, 4). 또한 1960년 소련의 외무성 부상인 쿠즈네소프가 평양을 방문해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고, 김일성이 1960년 8월14일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련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남한에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신평길 1996, 308-310).

하지만 소련의 연방제는 다양한 소수민족을 통합시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독일은 같은 민족의 결합을 연방이라는 이름에 담았고, 소련은 다른 민족들의 결합을 연방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 두 사례의 성격을 결합한 북한의 '련방' 개념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북한이 제시한 련방은 사회주의체제로 최종적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적 두 체제의 공존 형태가 된다. 즉 당시에는 '련방'이 통일의 방안일지언정 통일 자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탈냉전 시기 '민족' 단위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체제통일'보다 우선하는 통일의 형태로 상정하면서 북한의 '련방' 개념은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련방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곧 통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소련의 연방 개념은 부정된 것과도 같았다. 북한에서 련방의 의미는 사회주의혁명을 향한 '서로 다른 체제의 결합을 위한 방법'에서 체제보존을 위한 '단일민족의 결합 자체'로 변화했다. 이 변화의 계기는 '실익' 추구였으며, 이는 '민족의 이익'으로 설명되었다. 통일의 목표가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성격에서 자본주의체제와의 공존이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면서도 수세적 성격으로 바뀌면서 '련방'의 개념 역시 변화한 것이 된다. 이때 북한의 '련방' 개념은 통일의 당위성으로서 '단일민족'을 묶는다는 의미의 그릇이 되는데, 이러한 의미 변화를 담은 문구가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15선언에서 민족의 이익을 내세운 통일방안의 방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 등의 문구로 정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북한의 ‘련방제’ 영문 표기 변화

1. 통일방안 핵심용어로서의 ‘련방제’

북한은 1991년 ‘느슨한’ 련방제와 2000년 ‘낮은 단계의 련방제’가 같은 의미를 가진 통일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민족’을 내세워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시기의 련방제는 수식하는 한글 표현이 다를 뿐 의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통일방안의 핵심용어인 ‘련방제’는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남북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용어의 주도권 확보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이 연합제라는 단어를 고수하듯 북한 역시 련방제라는 단어를 고수하고 있는데, 기표(記標)를 확고히 하는 대신 기의(記意)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련방제’ 용어 비판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한다. 2000년 6.15 선언 6개월 뒤 로동신문에서는 남한 일부 세력이 6.15공동선언의 통일 방향을 이제 와서 부정하고 있다며 “그들은 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 통일방안을 받아 들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양보》라고 하면서 《련방제를 받아 들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괴이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한다(로동신문 2000/12/15, 5).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용어 자체에 대한 체제 간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련방제’라는 단어는 2000년 6.15선언을 기점으로 영문 표기가 바뀐다. 1991년이나 2000년이나 통일방안의 ‘수식어’만 바뀌었을 뿐 ‘련방제’는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던 그 ‘련방제’의 영문 표기가 달라진 것이다. 2000년 이전 confederation이었던 ‘련방제’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는 문구가 사용되면서 federation으로 바뀐다. 영문 표기가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뀐 방향이 영어 단어의 한글 해석상 '연합제'에서 '연방제'로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련방제' 영문 표기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단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federation은 라틴어 foedus에서 유래됐는데, 이는 covenant(계약, 서약)로서 결합을 의미하는 bind에 해당한다(Elazar 1998, 72). confederation이나 federation 모두 '결합'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연합'으로 해석되는 confederation은 조약에 기초한 국가 간의 결합이며, '연방국가'로 해석되는 federation은 헌법에 기초한 구성국 간 결합으로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기능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방제는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져 왔지만 현재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는 모두 국가 간 연합에서 연방국가로 전개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영국과 전쟁하기 위해 13개 국가가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으로 연합을 이룬 것이 시초가 되었고 이후 연방헌법(the Federal Constitution)을 갖추며 1789년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스위스 역시 국가 간 연합을 거쳐 1848년 연방제의 단일국가가 되었으며, 독일도 게르만민족 연합을 거쳐 1866년 연방제를 이룬 역사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북한의 '련방'이 confederation으로 표기된 데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서의 의도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는 추정이 제시된 바 있다. 북한이 련방과 련합의 의미 차이를 알면서도 그동안 련방을 confederation이라고 표기해 온 데 대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통일방안과 남한에 제시하는 통일방안이 다르다며 대내외를 분리한 이중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정성장 2004, 235-236).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는 '련방제'를 지향한다고 제시하면서도 대외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연합'에 가까운 영문 표기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구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남궁영 2006, 98). 이밖에도 북한이 제시하는 련방제는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절충적 형태이므로 국문을 '련방'으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confederal'로 표기한다고 해서 비밀관적이라거나 고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제시한 통일정부의 구성과 권한이 미합중국의 국가연합 단계에서와 흡사하므로 confederation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북한의 통일방안은 복합적 성격이므로 국영문 표기의 불일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우성대 2007, 116, 128).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 속에서도 2000년 이후의 영문 표기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에 영문 표기 변화의 의미와 함께 지난 해석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헌에서 ‘련방’의 영문 표기와 북한의 외국어 사전들을 총괄해 ‘련방’에 대한 표기 변화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2. 시기별 ‘련방’의 영문 표기

먼저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련방제’를 내놓은 1960년부터 『김일성저작집』 영문판(Kim Il Sung Works)에서 ‘련방’에 대한 영문 표기를 찾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김일성저작집』 영문판에서 ‘련방’의 영문 표기

시기	‘련방’의 표기	출처(출판연도)
1960년 8월 14일	a Confed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남북련방제)	김일성저작집 14권(1983)
1973년 6월 23일	the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고려련방공화국)	김일성저작집 28권(1986)
1980년 10월 10일	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약칭 DCRK	김일성저작집 35권(1989)
1991년 1월 1일	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약칭 DCRK	김일성저작집 43권(1998)
1993년 1월 1일	reunify the county by forming a confederation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	김일성저작집 44권(1999)
1994년 6월 30일	the reunified confederal state (통일된 련방국가)	김일성저작집 44권(1999)

출처: 박소혜 2020, 234.

〈표 1〉에서 보듯 1960년 '남북련방제', 1973년 '고려련방공화국', 19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991년 '련방제' 등 북한의 '련방/련방제'의 영문 표기는 모두 confederation/confederal이다. confederation은 federation과 함께 with의 뜻이 있는 접두어 con이 결합한 것으로 federation에 비해 '두 개'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북한의 사전에서도 1990년대까지 련방은 federation이 아닌 confederation으로 줄곧 표기되어 왔다. 사전에 나타난 '련방'의 영문 표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북한 사전에 나타난 '남북련방제/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영문 표기

사전(년도)	'련방'의 표기	
조영사전 (1970)	남북련방제	a confede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영조사전 (1991)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	Confederation under the name of a single country
조영사전 (1991)	고려민주련방공화국	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남북련방제	the Confederation of north and south
조영대사전 (2002)	고려민주련방공화국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남북련방제	the federation of north and south.

출처: 박소혜 2020, 234.

북한의 사전들에서는 2002년 출판된 『조영대사전』부터 90년대 사전들에서와 달리 련방제를 confederation이 아닌 federation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기 변화의 정확한 기점은 영자신문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을 보도한 북한의 영자신문인 평양시보(The Pyongyang Times)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를 "the low-level federation"으로 표기한다(2000/06/17). 평양시보 역시 1990년대까

지는 련방을 confederation으로 표기했다(1999/10/09). 그런데 6.15선언을 기점으로 이후 련방은 federation으로 표기된다(2014/07/05). 2000년 6월 15일은 북한의 ‘련방’에 대한 영문 표기가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뀐 결정적인 날이다.

3. ‘련방’과 ‘련합’에 대한 해석과 표기 혼용 사례

영문 표기 변화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고 논쟁이 되는 것은 confederation과 federation에 대한 한글의 대표 해석이 각각 ‘연합’과 ‘연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confederation과 federation을 각각 ‘연합’과 ‘연방’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해 왔을까?

북한은 통일방안을 ‘련합’이 아닌 ‘련방’이라고 일관되게 제안해 왔지만, 북한의 영어사전들에 나와 있는 련방과 련합은 뜻풀이와 영어 표기 모두에서 혼용돼 왔다. 이를 사전에서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영어사전인 『조영사전』에서 ‘련방’이라는 올림말 옆에는 “(‘련합’)이라고 표기해 련방을 ‘련합’으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뜻풀이는 『조영사전』 1970년판과 1991년 2판 모두 마찬가지다. 여기서 ‘련방’의 뜻은 “a federation; a confederation; a union; a commonwealth; a federal state.”로 federation과 confederation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올림말인 ‘련방제’는 “a federal system; federalism”, ‘련방정부’는 “the federal government”이지만 ‘남북련방제’는 “a confederation of the North and South”라고 명기해 놓았다(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 1970, 226; 외국문도서출판사 1991, 405).

즉 ‘련방’이라는 보통명사는 ‘련합’이라는 말과 혼용돼 있고, ‘련방제’와 ‘련방정부’라는 보통명사에는 federal이 활용되는 데 비해,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는 ‘련방제’는 confederation이라고 하여 두 단어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련방’이라는 보통명사가 곧 북한이 새롭게 정의한 ‘련방’ 개념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련방’은 ‘련합’과 혼용되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련방’의 개념을 북한의 ‘련방’ 개념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는 의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6.15선언 이후 북한의 연방제 영문 표기는 confederal에서 federal로 바뀌었다. 2002년판 『조영대사전』도 이를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로, 남북련방제를 “the federation of north and south”로 표기하고 있다(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사전편찬집단 2002, 161, 406).

그런데 이 같은 일관성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다. 북한의 전자사전에 해당하는 『삼흥 3.0판 다국어대사전』에서는 2002년판 『조영대사전』을 수록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과 ‘남북련방제’를 confederal/confederation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삼일포정보센터, 2004). 이 다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독일 어사전인 2003년판 『조도사전』에서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federal이 아닌 confederal에 해당하는 “die Demokratische Konföderative Republik Koryo”로 표기되어 있다. 2000년 이후에 나온 전자사전에서는 confederal이 federal로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사전’이 최신 사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만일 ‘련방’에 대한 영어 표기 변화가 다른 외국어의 표기에도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면 북한의 대외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만일 영어 표기 변화가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면 북한의 수직적 체제상 이러한 혼용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confederation과 federation의 표기 변화가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단순한 혼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조금 다른 사례로 ‘스위스련방’ 표기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1848년까지 연합제였다가 연방헌법 채택 이후 연방제로 바뀌었지만 나라명에서 ‘연합(confederation)’의 표기는 버리지 않았다. 북한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1992년 『영조대사전』과 2005년 『현대영조사전』 등에서 ‘스위스련방’은 “the Swiss Confederation”로 표기하고 있다(외국문도서출판사 1992, 2573; 외국문도서출판사 2005, 2333). 하지만 2017년 『현대영어필수어휘집』에서는 ‘federal’의 용례로 “스위스는 련방국가이다. Switzerland is a federal republic.”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철룡 외 2017, 476). 이는 confederation과 federal의 표기 혼용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영문 표기 변화의 의미

1. ‘련방’ 개념으로 본 영문 표기 변화의 의미

북한의 조선말사전에서 풀이하는 ‘련방’ 개념도 시기별로 변화를 겪어 왔다. ‘련방’ 개념의 시기별 뜻풀이를 통해 영문 표기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1961년 『조선말사전』에서 ‘련방’은 “① 두 개 이상의 독립 국가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주권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 ②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가들의 연합.”으로 풀이된다(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1961, 365). 이는 ‘련방’이 곧 ‘연합’이라는 말로 풀이되는 단어이며, 련방과 연합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1973년 『정치사전』에서는 ‘련방제국가’의 풀이로 “련방제는 말과 풍습,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국가구조형식의 하나”라고 하여 단일민족인 남과 북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소련의 연방 개념을 올려놓고 있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313). 북한은 소련의 ‘련방’ 개념을 차용했는데, 1917년 이후부터 1991년 사이의 소비에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은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사회주의체제로 묶기 위한 “민족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련방’이 의미를 가졌다. 이때의 ‘련방’은 여러 민족들을 한 체제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으로 표기되었다(외국문도서출판사 1991, 1258). ‘남북련방제’는 이러한 체제 통일의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체제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연합’에 가까운 영어표기인 confederation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973년 『조선문화어사전』에서는 ‘련방제’의 뜻을 두 가지로 풀이하면서 첫 번째 뜻풀이로는 “완전한 통일의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조선’에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이라는 김일성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 뜻풀이로 “두개 이상의 독립국가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제도”라고 풀이하여 북한만의 련방제 개념을 첫째 의미에 따로 추가해 두었음을 볼 수 있다(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287-288). ‘련방’은 ‘연합’으로 설명되는 개념이면서도 ‘련방제국가’가 곧 ‘국가연합’은 아니라는 점 또한 사전에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313). 여기서 '련방'이나 '련합' 모두 "두개 이상의 국가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는 '최고주권기관 유무'에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의 '통일' 개념은 최고주권기관이 있는 것이었지만 '련방제'는 통일의 과도기이므로 '최고주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연합'에 가까운 것이 된다. 따라서 federation보다는 confederation에 더 가까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에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최종적 통일국가'이지만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련방은 아직은 두 체제의 결합이므로 confedera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련방제'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일민족의 통일방안이 '련방'이 될 수 있다고 개념을 수정한다. 1981년 『현대조선말사전』에서 '련방'은 "두개 이상의 국가들의 련합"뿐 아니라 "한 나라안의 지역정부들이 련합하여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는것"이라는 설명이 추가된다(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806). 여전히 련방은 뜻풀이 속 '련합'에 해당하는 confede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시기인 1991년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특수관계'로 표현되면서 실질적으로 두 개 국가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자본주의 나라'와 구분되어야 했기 때문에 '두개 조선'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고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하나의 생존방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체제전환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북한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본주의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탈냉전 흐름에 합류하는 것'으로서 생존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붕괴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탈냉전에 저항함으로써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워 생존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방안 역시 '자본주의 국가와의 거리두기'와 '붕괴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거리두기'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했다.

이렇게 위기에 대처해 나간 북한은 2000년 6.15선언에서 련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 이는 련방제의 성격이 연합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련방제' 시행이 곧 '민족의 통일' 자체가 되는 것이므로 confederation을 federation으로 바꾸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단어의 기표

를 고정해 놓되 의미를 바꿔서 개념을 수정한 것이다. 영문 표기의 변화는 조선어의 의미 변화를 나타내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련방’이라는 기호를 일관되게 주도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련방’에 ‘련합’을 추가한 기호를 사용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2014년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에서 “북과 남은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여 남북 사이에 합의된 통일방안을 ‘련방련합’이라고도 표현한다(로동신문 2014/07/07, 2). 여전히 ‘련방’과 ‘련합’은 뜻풀이에서는 혼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은 ‘련방’이라는 기호에 북한의 통일방안을 담아 개념을 변화시켜 왔다. ‘련방’의 사전 뜻풀이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만큼 두 단어 자체도 일정 정도의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련방’ 개념이 담고 있는 통일의 성격과 결합력 차원의 변화로 인해 영문 표기는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2. ‘낮은 단계의 련방’ 개념의 창조와 영문 표기 변화

북한이 200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련방’의 영문 표기를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꾼 것은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부터다. federation으로의 표기 변화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는 문구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단계’에서 통일방안은 confederation보다는 결합력이 강한 federation이어야 초보적이라도 ‘통일 자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일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confederation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낮은 단계’로서 두 국가, ‘confederation’으로서의 두 국가 성격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상태를 ‘통일 그 자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의 confederation은 1960년대 통일의 과도기로서 두 체제를 의미했고, 1980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통일방안이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 북한은 위기의 돌파구로서 통일을 ‘두 체제의 과도기를 거친 후의 체제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결합’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federation은 ‘련방’ 그 자체를 통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

서 요청되는 결합력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련방'과는 별도로 '통일'의 영어 표기 역시 특정 시기 변화를 줬다. 북한의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표기가 unification에서 '재통일'로 해석되는 reunification으로 바뀐 것은 '민족'과 관련된다. unification이 체제통일에 가깝다고 한다면 reunification은 민족의 재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민족'이 부각되고 탈냉전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부활하면서 북한의 통일은 '체제통일'보다는 '민족의 재통일'로 변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영어 사전에서 북한이 통일의 영문 표기를 unification에서 reunification으로 바꾸는 시점은 1990년대로 추정된다. 1970년 『조영사전』에서 북한의 통일은 unification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reunification은 통일혁명당(the Revolutionary Party for Reunification)에서만 등장한다(평양외국어대학 천리마영어강좌 1970, 597). 이후 1992년 『영조사전』에 reunification/reunify를 '재통일'이라는 뜻으로 수록했으며(외국문도서출판사 1992, 2167), 2002년 『조영대사전』에서는 통일을 (re)unification 등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칭하는 통일은 reunification으로, 남한이나 미국 등이 지칭하는 통일은 unification으로 표기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북한의 통일이 reunification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사전편찬집단 2002, 2180-2181).

본고에서는 '낮은 단계의 련방'의 영문 표기가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뀐 것은 통일의 영문 표기가 unification에서 reunification으로 바뀐 것과 연동된다고 보았다. confederation을 북한식으로 해석해 단일체제로의 통일로 향하는 과도기의 결합 형태로 본다면 완성된 통일은 unific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unification은 통일 이전에 민족이나 체제가 하나였는지는 관계가 없으며 앞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federation은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결합한다는 뜻으로 보아 재통일을 의미하는 reunification과 연결해볼 수 있다.

탈냉전 시기 북한은 통일의 목표이자 우선순위를 하나의 민족이 결합하는 '전민족 대단결'에 두었다. 따라서 통일방안은 '낮은 단계'가 되더라도 '민족'의 재통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통일'이 된다. 통일의 목표이자 우선순위가 '체제통일'이었다면 과도기의 통일방안은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confederation이 될 수

있지만, 목표가 ‘민족통일’이라면 낮은 단계더라도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federation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는 통일방안은 ‘외교와 군사권을 가진 두 지역정부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실제 연합제에 가깝지만 북한이 통일의 최우선 가치로 놓게 된 ‘민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는 상태가 되므로 confederation보다는 federation에 가깝게 되었고, 이는 영문 표기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낮은 단계의 련방제’는 ‘민족’ 중심의 통일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6.15선언을 기점으로 ‘련방’의 영문 표기가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confederation에서 “low-level federation”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족의 재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V. 결론

북한에서 ‘련방’의 영어 표기가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통일 목표이자 우선순위의 가치가 ‘체제통일’에서 ‘민족통일’로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련방’을 confederation으로 표기할 때의 통일방안은 ‘체제통일’을 염두에 둔 통일의 과도기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일은 unification이 된다. 또한 ‘련방’을 federation이라고 표기할 때의 통일방안은 ‘민족의 재통일’을 통일의 과도기가 아닌 ‘초보적 형태의 통일 그 자체’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일은 reunification이다. 즉 통일의 과도기적 상태는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confederation으로, 통일된 상태는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federation으로 인식하고 표기했을 수 있다. 이는 보편적 개념의 련방과 연합의 차이를 최고주권기관의 유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결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15선언 이후 ‘련방’의 영문 표기가 북한의 다른 외국어 사전들을 포함한 모든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변화되었어야 이를 북한의 공식적인 의도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표기 변화라기보다는 단순한 ‘혼용’이

라고 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 만일 단순히 혼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의도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영문 표기 변화 역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련방' 개념의 변화 맥락으로 보아 '민족의 재통일'을 염두에 둔 민족의 결합력 차원에서 '련방'의 영문 표기 변화가 이뤄졌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정의와 '련방'의 개념은 연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정치적인 체제통일이라는 목표에 앞서 평화보장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서 '통일'의 기호에 담기는 의미를 바꿀 필요가 생겼고, 통일방안인 '련방'에 민족통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통일 개념 또한 체제보다는 민족의 결합에 가깝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지난 시기 의미 변화를 거듭해 왔다. '련방'이라는 기호에 담긴 통일방안은 대내외 상황에 대처한 북한의 대응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개념의 연방과 다른 '북한 식 련방'은 역사적 경험상 체제흡수 통일의 전 단계인 연합제에 가까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로 다른 체제를 민족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초보적 통일"이라는 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련방'의 영문 표기 변화 고찰은 앞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 식' 개념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덧붙여 북한이 남북의 통일방안에 있어서 '련방제'라는 용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형태를 반영한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 각각 용어를 '연방'과 '연합'으로 선택했다.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연방이나 연합과의 적합성만으로 해석하기엔 '서로 다른 체제의 단일민족 통일국가' 수립 사례가 역사적 선례에 있지 않아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과 북의 체제경쟁에 있어서 용어의 주도권은 훗날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든 간에 그 시점에서 통일국가의 역사를 기술할 때 남과 북 사이 정통성을 다투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주요 개념들에서 기의보다도 기표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남북관계 협의 과정에 있어서 연방이나 연합과 같은 '기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적 의미를 따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통일방안 합의를 담은 6.15공동선언은 선언적 의미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실천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연방과 연합을 각각 앞세웠던 남북은 현재 통일 논의가 잠잠한 대신 ‘평화’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 개념 속에서 통일방안의 새로운 합의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 고 일: 2020. 07. 03.

심사완료일: 2020. 08. 11.

게 재 일: 2020. 08. 30.

참고문헌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1961, 『조선말사전 2권』. 평양: 과학원출판사.
- 김일성. 1981.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돛경축대회에서 한 보고(1960년 8월 14일),” 『김일성저작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4.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6월 23일),” 『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철룡 외. 2017. 『현대영어필수어휘집』. 평양: 외국문출판사.
- 남궁영. 2006.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쟁점과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 제3호.
- 박소혜. 2020. “북한의 통일 개념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학위 논문.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삼일포정보센터. 2004. 『삼흥 3.0판 다국어대사전』.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 신평길 편저. 1996. 『김정일과 대남공작』. 서울: 북한연구소.
- 안경호. 2000.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돛 기념 평양시보고회 보고,” 『조선중앙방송』. 10월 6일.
- 외국문도서출판사. 1991. 『영조사전』, 제6판.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 _____. 1991. 『조영사전』, 제2판.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 _____. 1992. 『영조대사전』.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 _____. 2005. 『현대영조사전』.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 우성대. 2007.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의 비교연구: 개념적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 이승환. 2009. “문익환, 김주석을 설득하다: 늦봄 방북 20주년을 맞아,” 『창작과비평』. 제37권 제1호.
- 이우영. 2002. “정상회담 이후 북한 사회문화의 변화: 자본주의 인식변화와 문화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7집.

장석. 2002.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정성장. 2004.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사전편집집단. 2002. 『조영대사전』.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평양외국어대학 천리마영어강좌. 1970. 『조영사전』. 평양: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

로동신문. 1957년 8월 3일. 1991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2000년 6월 25일.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4일. 2014년 7월 7일.

Elazar, Daniel J. 1998. *Constitutional Globalization: The Postmodern Revival of Confederal Arrangement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The Pyongyang Times. 1999년 10월 9일. 2000년 6월 17일. 2014년 7월 5일.

A Study on North Korea's Change of the English Notation of “(Con)federation”

So Hye Park

The federal system, North Korea's (re)unification plan, has changed its meaning over time. North Korea, which proposed a “loose” confederation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 suggested at the 2000 inter-Korean summit that “low-level federation”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South Korea's official unification plan, Korean commonwealth. North Korea said that “loose confederation” and “low-level federation” have the same meaning, but the English notation of the system changes from “confederation” to “federation.”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concept of “(con)federation” and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labeled as “confederation” before the 1990s was aimed at “unification of the system”, and marking it as “federation” from the 2000s was “reunification of the people” to emphasize the cohesion. This interpretation can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context where the English notation of (re)unification in North Korea changes from unification to reunification.

Keywords: Federation, Low-level Federation, Reunification, Unification, Confederation

